



강원도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U



E

REPORT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연구진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CONTENTS

I	강원도 인구감소 실태	04
1	인구감소 현황 및 추이	04
2	지자체별 인구감소 유형	09
3	지자체 유형별 인구특성	10
II	인구정책 관련 제도 및 정책	18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8
2	국가균형발전정책	24
III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추진현황	29
1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29
2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39
IV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46
1	기본방향	46
2	추진개요	49
3	추진방식	51
4	추진전략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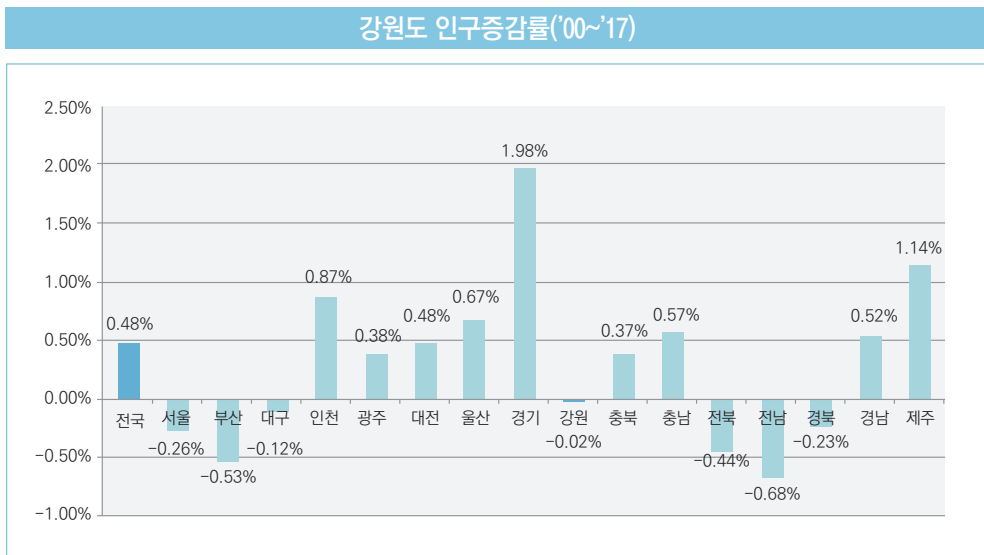


I 강원도 인구감소 실태

1 인구감소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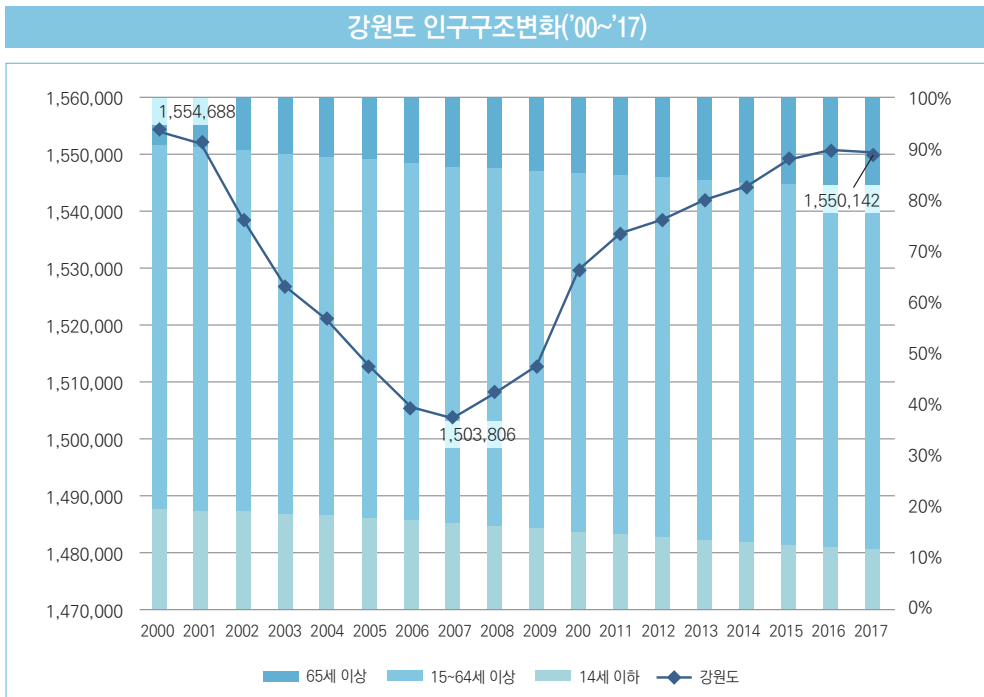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 강원도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00년 1,554,688명에서 2017년 1,550,142명으로 연평균 0.02%씩 감소해왔음
- 전남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0.68%, 부산 -0.53%, 전북이 -0.44%, 서울 -0.26% 등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나,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0.48%씩 증가해왔음



- 연도별로 살펴보자면 강원도 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1,503,806명으로 최저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이는 원주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원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청소재지인 춘천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원주시와 춘천시를 제외하고 강원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감소 추세에 있음
 - 원주시와 춘천시, 횡성군, 화천군과 양구군의 5개 시군은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음
 - 횡성군의 경우 귀촌인 증가로 인해 다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천군과 양구군의 경우 부사관 등 군인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로 판단됨
 -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1% 이상 감소한 시군은 정선군(-1.60%), 태백시(-1.27%), 삼척시(-1.06%), 영월군(-1.03%) 순임
- 강원도의 인구구조는 2000년 이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7년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18.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유소년인구 비율은 11.9%에 불과함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I 강원도 시군별 인구현황 및 추이 I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연평균인구 증감률
전국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778,544	0.48%
강원도	1,554,688	1,513,110	1,529,818	1,549,507	1,550,142	-0.02%
춘천시	251,212	254,999	269,950	277,997	280,514	0.65%
원주시	270,009	288,454	314,678	332,995	341,337	1.39%
강릉시	233,121	224,391	218,503	214,560	213,952	-0.50%
동해시	103,654	99,230	95,236	93,895	92,851	-0.64%
태백시	57,023	52,463	50,864	47,501	45,888	-1.27%
속초시	90,032	87,124	84,302	81,992	82,273	-0.53%
삼척시	82,177	73,134	72,046	70,839	68,514	-1.06%
홍천군	74,461	70,811	69,893	70,336	70,340	-0.33%
횡성군	45,961	43,678	44,254	45,777	46,281	0.05%
영월군	48,393	41,538	40,407	40,216	40,067	-1.03%
평창군	47,125	45,033	43,622	43,500	43,092	-0.52%
정선군	50,572	44,203	41,045	39,197	38,173	-1.60%
철원군	53,190	48,933	48,928	48,799	47,185	-0.69%
화천군	25,188	23,732	24,364	27,020	26,022	0.23%
양구군	23,420	21,480	21,843	24,089	23,835	0.12%
인제군	33,618	32,811	31,842	33,255	32,582	-0.18%
고성군	35,391	31,964	30,112	30,060	30,029	-0.96%
양양군	30,141	29,132	27,929	27,479	27,207	-0.60%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전국 대비 사회적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둔화 전망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총인구가 204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45년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강원도의 출생자수는 2020년 1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5년에는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사망자수는 2020년 1만 3천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5년 2만 5천 명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자연감소가 가속화될 전망
- 반면 순이동자수는 2020년 7천 명에서 2045년 1만 2천 명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사회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Ⅰ 전국 및 강원도 장래추계('20~'45) Ⅰ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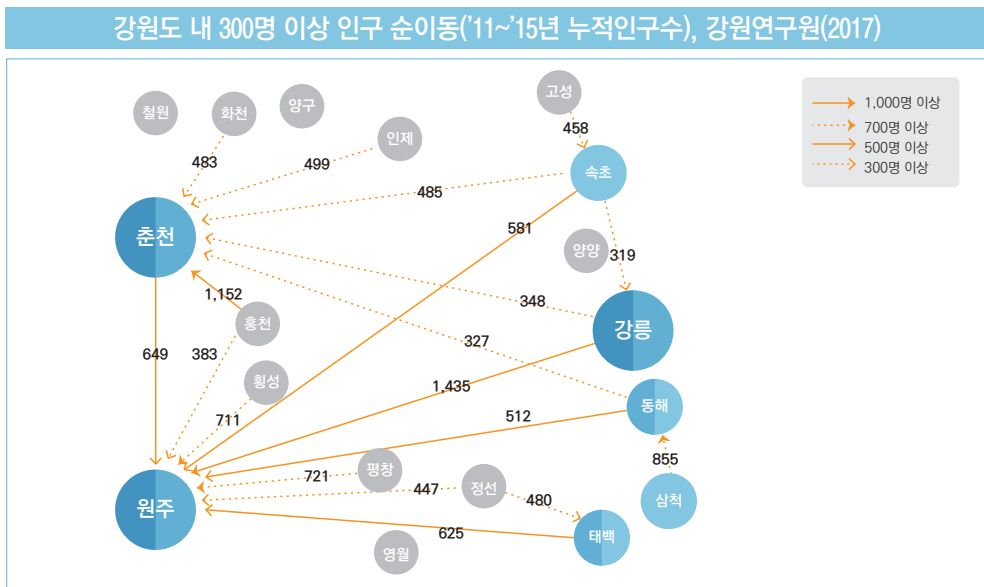
구분		'20	'25	'30	'35	'40	'45
전국	인구	51,974	52,610	52,941	52,834	52,198	51,051
	출생아수	409	417	406	362	322	306
	사망자수	324	373	423	480	547	627
	자연증감	85	44	-17	-118	-225	-321
	순이동수	64	51	33	33	34	34
	유소년인구비율	12.6%	12.1%	11.5%	11.3%	10.8%	10.1%
	생산가능인구비율	71.7%	68.0%	64.0%	60.0%	56.4%	54.3%
	고령인구비율	15.6%	20%	24.5%	28.7%	32.8%	35.6%
강원도	인구	1,532	1,550	1,569	1,583	1,584	1,568
	출생아수	10	10	10	9	8	7
	사망자수	13	15	17	19	22	25
	자연증감	-3	-5	-7	-10	-14	-18
	순이동수	7	9	11	12	12	12
	유소년인구비율	11.4%	10.7%	10.1%	9.8%	9.2%	8.5%
	생산가능인구비율	68.7%	64.1%	59.3%	54.7%	50.5%	48.1%
	고령인구비율	19.8%	25.3%	30.6%	35.6%	40.3%	43.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 인구의 사회증가는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강원도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귀농인과 동반가구원수를 포함하여 총 147,90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귀농인구의 경우 50대가 2,76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가 1,667명, 40대 1,132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귀촌인구는 29세 이하가 40,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05명, 40대 23,130명 순임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인구집중, 격차 확대

- 강원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도 인구는 원주시와 춘천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원주시 인근 농촌지역인 홍천, 횡성, 평창, 정선뿐만 아니라 태백, 동해, 속초, 춘천에서 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에서의 인구이동이 가장 많았음
 - 춘천은 홍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화천, 인제, 속초, 강릉, 동해 등에서도 인구가 유입되었고 원주로 지난 5년간 649명이 유출됨



출처: 박상현 외(2017),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p.100

2 지자체별 인구감소 유형

자녀증감과 사회증감을 동시에 고려한 강원도 지자체 유형 분류

- 총인구의 증감과 인구의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을 모두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총인구증감량은 주민등록인구를 2016년에서 2000년을 빼서 구하였으며,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은 2000년 이후 최근년도까지 누적한 순자연증감량과 순이동자수를 구하여 적용
 - ※ 순자연증감량은 (출생자수-사망자수), 순이동자수는 (전입자수-전출자수)임
- 인구감소지역인 유형Ⅳ와 유형Ⅴ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3개로 72%를 차지하며 인구증가지역은 5개 시군으로 28%를 차지
 - 2017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총인구증가지역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며 총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54%를 차지함

I 인구증감에 따른 강원도의 지자체 유형 분류 I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시군수(개)	비율	인구수(만 명)	비율	시	군
총인구 증가 지역	+	+	유형 I	2	11%	62.1	40%	원주시, 춘천시	-
	+	-	유형 II	2	11%	5.0	3%	-	화천군, 양구군
	-	+	유형 III	1	6%	4.6	3%	-	횡성군
	소계			-5	28%	71.7	46%	-	-
총인구 감소 지역	-	-	유형 IV	7	39%	31.7	20%	삼척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	-	유형 V	6	33%	51.4	34%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철원군, 인제군
	소계			13	72%	83.1	54%	-	-
합계				18	100%	155.0	100%	-	-

주: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은 2017년 사망자수 통계의 부재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함(주민등록인구 기준).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지자체 유형별 인구특성

지자체 유형별 인구 규모

- 유형 I 은 인구가 자연적, 사회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지역으로 원주시와 춘천시가 해당되며, 2017년 기준 이들의 총인구는 약 62만 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함
 - 원주시와 춘천시는 2000년에 비해 2017년에 약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6천 명가량 더 많으며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1.04%로 강원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유형 II 는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사회적으로는 유출되지만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화천군과 양구군이 해당됨
 -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0.15%로 부사관 등 젊은 군인인구가 많은 지역인 화천군은 남성 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약 4천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

I 지자체 유형별 인구증감량과 증감률 I

(단위 : 명)

구분	2000			2017			인구증감량* ('00~'17)	연평균인구증감률 ('00~'17)	
	총인구	남	여	총인구	남	여			
강원도	1,554,688	781,133	773,555	1,550,142	780,635	769,507	-4,546	-0.02%	
총인구 증가 지역	소계	615,790	307,728	308,062	717,989	358,523	359,466	102,199	0.91%
	유형 I	521,221	259,304	261,917	621,851	307,901	313,950	100,630	1.04%
	유형 II	48,608	24,907	23,701	49,857	27,081	22,776	1,249	0.15%
	유형 III	45,961	23,517	22,444	46,281	23,541	22,740	320	0.04%
총인구 감소 지역	소계	938,898	473,405	465,493	832,153	422,112	410,041	-106,745	-0.71%
	유형 IV	368,260	186,650	181,610	317,422	162,567	154,855	-50,838	-0.87%
	유형 V	570,638	286,755	283,883	514,731	259,545	255,186	-55,907	-0.60%

주: 인구증감량은 2017년 인구수에서 2000년 인구수를 뺀 값임.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2000~2017).

Ⅰ 유형별·지자체별 인구현황 및 추이 Ⅰ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연평균인구 증감률	
강원도	1,554,688	1,513,110	1,529,818	1,549,507	1,550,142	-0.02%	
유형 I	소계	521,221	543,453	584,628	610,992	621,851	1.04%
	춘천시	251,212	254,999	269,950	277,997	280,514	0.65%
	원주시	270,009	288,454	314,678	332,995	341,337	1.39%
유형 II	소계	48,608	45,212	46,207	51,109	49,857	0.15%
	화천군	25,188	23,732	24,364	27,020	26,022	0.23%
	양구군	23,420	21,480	21,843	24,089	23,835	0.12%
유형 III	소계	45,961	43,678	44,254	45,777	46,281	0.05%
	횡성군	45,961	43,678	44,254	45,777	46,281	0.05%
유형 IV	소계	368,260	335,815	325,054	321,627	317,422	-0.87%
	삼척시	82,177	73,134	72,046	70,839	68,514	-1.06%
	홍천군	74,461	70,811	69,893	70,336	70,340	-0.33%
	영월군	48,393	41,538	40,407	40,216	40,067	-1.03%
	평창군	47,125	45,033	43,622	43,500	43,092	-0.52%
	정선군	50,572	44,203	41,045	39,197	38,173	-1.60%
	고성군	35,391	31,964	30,112	30,060	30,029	-0.96%
	양양군	30,141	29,132	27,929	27,479	27,207	-0.60%
유형 V	소계	570,638	544,952	529,675	520,002	514,731	-0.60%
	강릉시	233,121	224,391	218,503	214,560	213,952	-0.50%
	동해시	103,654	99,230	95,236	93,895	92,851	-0.64%
	태백시	57,023	52,463	50,864	47,501	45,888	-1.27%
	속초시	90,032	87,124	84,302	81,992	82,273	-0.53%
	철원군	53,190	48,933	48,928	48,799	47,185	-0.69%
	인제군	33,618	32,811	31,842	33,255	32,582	-0.18%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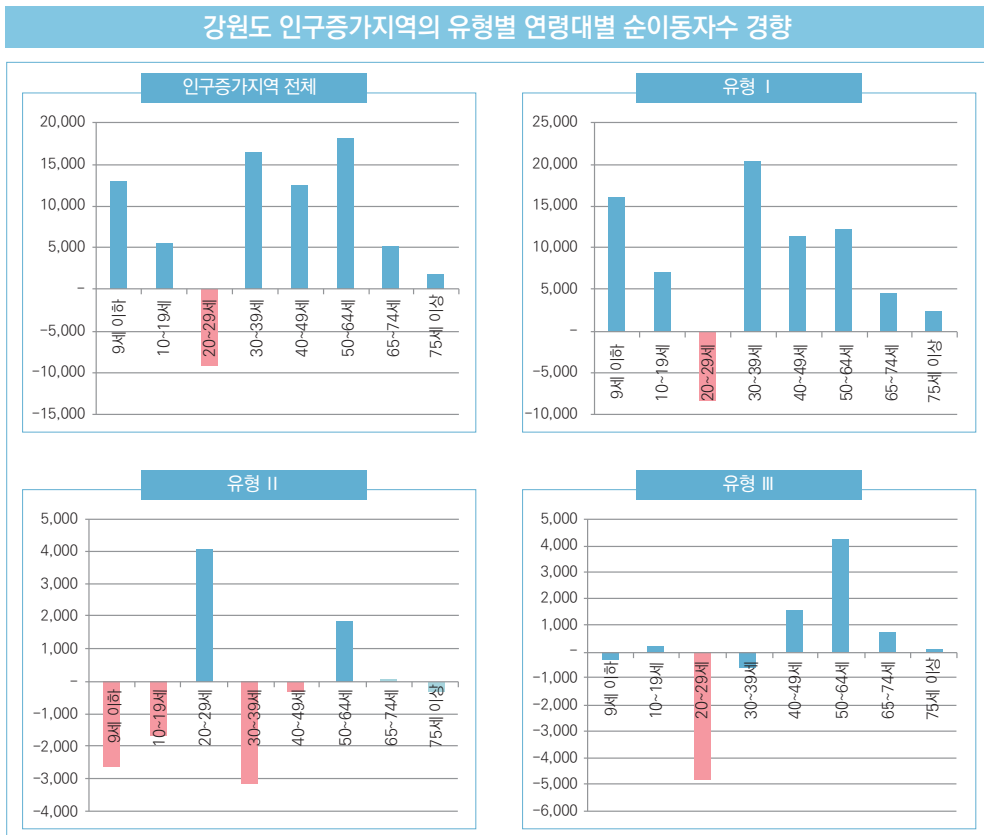
- 유형Ⅲ은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감소하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총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횡성군이 해당됨
 - 2017년 총인구는 약 4만 6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20명이 증가했으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04%이고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더 많음
-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의 인구증가지역 중에서도 유형Ⅰ에 속하는 원주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증가율이 1.39%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았음
 - 원주는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인 춘천시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도시개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유형Ⅱ나 유형Ⅲ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각각 0.15%, 0.05%로 원주시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았음
 - 특히, 유형Ⅱ의 경우 최근 다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유형Ⅰ에 속해 있는 원주나 춘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유형Ⅳ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 포함되며, 연평균 인구는 0.87%씩 꾸준히 감소해왔음
 - 유형Ⅳ 중에서도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의 경우 연평균 인구가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고성군은 인구증감률이 -0.96%로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한 편임
 - 홍천군은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0.33%로 유형Ⅳ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편인데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인구감소 현상을 다소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첫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로 지정된 홍천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736명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었음(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유형Ⅴ는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사회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철원, 인제가 포함되어 있음
 - 유형Ⅴ 중에서도 태백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1.27%로 높은 편인데 과거 탄광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가 폐광에 의해 일자리가 감소하여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태백시의 2017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67.6%로 유형Ⅴ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제군의 경우 유형V 중에서는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0.18%로 가장 양호한 편이지만 이는 인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 군인들의 전입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문제로 10대의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형IV와 유형V에 속하는 인구감소지역 모두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은 편

지자체 유형별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추이

- 강원도는 전국과 달리 인구증가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20대 인구는 모두 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연적으로는 감소하나, 사회적으로 유입되어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III (횡성군)의 경우 20대 유출이 인구증가지역 중에서 가장 심각



- 또한 사회적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II(화천군과 양구군)의 경우 전국과는 달리 2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순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강원도는 전국과 달리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50대 인구는 순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다소 증가하나 사회감소로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V는 전체 유형 중에서 50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자연적, 사회적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유형인 유형IV의 경우 40대와 50대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연령대별 순이동자수 경향



⑧ 인구의 사회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은 특히,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고 고령화 심각

Ⅰ 강원도 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구조('17) Ⅰ

(단위: 명)

구분		유소년인구 및 비율		생산가능인구 및 비율		고령인구 및 비율	
강원도		184,405	11.9%	1,085,761	70.0%	279,976	18.1%
유형 Ⅰ	소계	83,585	13.4%	449,106	72.2%	89,160	14.3%
	춘천시	36,395	13.0%	200,205	71.4%	43,914	15.7%
	원주시	47,190	13.8%	248,901	72.9%	45,246	13.3%
유형 Ⅱ	소계	6,010	12.1%	34,642	69.5%	9,205	18.5%
	화천군	3,062	11.8%	18,014	69.2%	4,946	19.0%
	양구군	2,948	12.4%	16,628	69.8%	4,259	17.9%
유형 Ⅲ	소계	4,004	8.7%	30,252	65.4%	12,025	26.0%
	횡성군	4,004	8.7%	30,252	65.4%	12,025	26.0%
유형 Ⅳ	소계	29,439	9.3%	212,275	66.9%	75,708	23.9%
	삼척시	6,844	10.0%	46,577	68.0%	15,093	22.0%
	홍천군	7,141	10.2%	47,300	67.2%	15,899	22.6%
	영월군	3,338	8.3%	26,355	65.8%	10,374	25.9%
	평창군	3,928	9.1%	28,765	66.8%	10,399	24.1%
	정선군	3,443	9.0%	25,401	66.5%	9,329	24.4%
	고성군	2,415	8.0%	20,314	67.6%	7,300	24.3%
	양양군	2,330	8.6%	17,563	64.6%	7,314	26.9%
유형 Ⅴ	소계	61,367	11.9%	359,486	69.8%	93,878	18.2%
	강릉시	24,420	11.4%	149,748	70.0%	39,784	18.6%
	동해시	12,090	13.0%	64,880	69.9%	15,881	17.1%
	태백시	5,262	11.5%	31,000	67.6%	9,626	21.0%
	속초시	9,838	12.0%	58,971	71.7%	13,464	16.4%
	철원군	5,626	11.9%	32,295	68.4%	9,264	19.6%
	인제군	4,131	12.7%	22,592	69.3%	5,859	18.0%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 유형 I 과 유형 II 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4%와 12.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증가하는 유형 V 도 11.9%로 높은 편
 - 반면 인구가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유형 III 과 유형 IV 의 경우 각각 8.7%와 9.3%로 유소년인구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26.0%와 23.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는 강원도 전체의 경우 70.0%인데 비해 유형 I 의 경우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형 III 과 유형 IV 는 각각 65.4%와 66.9%로 낮은 편임
 - 유형 IV 에서는 양양군이 64.6%로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영월군이 65.8%, 정선군이 66.5% 순임
- 한편 유형 V 는 인구가 사회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8%로 유형 I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속초시 71.7%, 강릉시 70.0%, 동해시 69.9% 등으로 높은 편에 속함
- 고령인구의 경우 강원도 전체가 18.1%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유형 III 과 유형 IV 는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26.9%), 횡성군(26.0%), 영월군(25.9%) 순으로 나타남

20~30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 2000년 20~30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은 15.8%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0.8%에 불과
 - 2000년 이후로 20~30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속초시로 6.4%가 감소했으며 그다음으로 동해시 6.2%, 평창군 6.0%씩 감소함
- 2017년 20~30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강원도 전체평균(10.8%)보다 높은 지역은 유형 I 의 춘천시(12.6%)와 원주시(12.6%)뿐이며 다른 지역은 모두 10.8% 미만
- 2017년 유소년인구 비중이 낮았던 유형 III 과 유형 IV 의 여성인구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유형Ⅲ에 속해 있는 횡성군이 8.1%로 매우 낮은 편이며 유형Ⅲ의 영월군과 양양군이 각각 7.7%로 최저임

Ⅰ 강원도 지자체유형별 20~30대 여성인구비율 추이 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강원도		15.8%	14.3%	12.4%	11.1%	10.8%
유형 I	소계	17.2%	15.7%	13.9%	12.7%	12.6%
	춘천시	17.0%	15.4%	13.8%	12.6%	12.6%
	원주시	17.3%	15.9%	14.1%	12.8%	12.6%
유형 II	소계	14.6%	12.9%	11.0%	10.4%	10.1%
	화천군	14.8%	13.0%	10.7%	10.1%	10.1%
	양구군	14.5%	12.7%	11.3%	10.6%	10.1%
유형 III	소계	13.1%	11.7%	9.6%	8.3%	8.1%
	횡성군	13.1%	11.7%	9.6%	8.3%	8.1%
유형 IV	소계	13.8%	12.3%	10.4%	9.0%	8.6%
	삼척시	14.1%	12.6%	11.2%	10.4%	10.1%
	홍천군	14.3%	12.5%	10.5%	9.2%	8.8%
	영월군	13.3%	11.2%	9.3%	8.0%	7.7%
	평창군	14.1%	12.5%	10.1%	8.5%	8.1%
	정선군	13.3%	13.1%	11.0%	8.9%	8.1%
	고성군	13.6%	11.4%	9.6%	8.5%	8.3%
	양양군	13.5%	12.0%	9.9%	8.1%	7.7%
유형 V	소계	16.1%	14.5%	12.3%	10.7%	10.4%
	강릉시	16.3%	14.7%	12.6%	11.0%	10.7%
	동해시	16.4%	15.1%	12.4%	10.7%	10.2%
	태백시	15.1%	14.2%	12.1%	10.2%	9.5%
	속초시	17.1%	15.0%	12.4%	10.8%	10.7%
	철원군	14.7%	12.6%	11.1%	9.9%	9.7%
	인제군	15.1%	13.3%	11.8%	10.5%	10.4%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II 인구정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국가는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
 - 지자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주요 내용 I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을 수립	
구분	저출산대책 (제7조~제10조)	- 인구정책(제7조)과 인구교육(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육(제8조), 모자보건의 증진(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고령사회정책 (제11조~제19조)	- 고용과 소득보장(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조), 취약계층노인 등(제16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제17조), 경제와 산업 등(제18조),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제19조)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55.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56.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제1차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은 2006~2010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은 2011~2015년까지 추진되었음
-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2020)이 2016년부터 추진 중임
 - 제3차 기본계획의 예산은 총 197조 원으로 저출산대책에 55%(108조 원), 고령사회대책에 45%(89조 원)가 편성되어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이며 고령사회 대책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드는 것임
 - 구체적인 목표로는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이는 것이며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로 축소하는 것임

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구분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목표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추진 전략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조성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 여성·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출처: 박진경·김상민(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4.

- 저출산·고령사회 시책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보조를 받는 ‘공통사업’과 국비보조 없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
 - 2016년 기준 저출산·고령사회 공통사업은 총 21조 2천억 원, 자체사업은 4.0조 원으로 공통사업이 84.1%를 차지
 - 21.2조 원의 공통사업 중에서 국비는 13.3조 원으로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가 37.3% 매칭
 -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사업예산은 총 25.2조 원 중에서 국비가 52.7%, 지방비가 47.3%를 차지
- 강원도의 경우 공통사업이 1조 1천억 원으로 전체 공통사업예산의 5.2%를, 자체사업은 1천억 원으로 전체 자체사업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총예산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은 시도는 세종(73.7%), 울산(62.0%), 제주(61.0%) 등이나, 강원도의 경우 53.3% 정도를 매칭하고 있음

Ⅰ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사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Ⅰ

(단위: 천억 원, %)

구분	공통사업					자체 사업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전국	212.0	132.8	62.7	79.1	37.3	40.1	252.0	132.8	52.7	119.0	47.3
서울	37.7	17.8	47.1	20.0	52.9	4.0	41.7	17.8	42.5	24.0	57.5
부산	13.2	10.2	77.1	3.0	22.9	4.3	17.6	10.2	58.2	7.3	41.8
대구	5.8	4.2	72.3	1.6	27.7	1.9	7.7	4.2	54.5	3.5	45.5
인천	10.5	7.9	74.9	2.6	25.1	0.7	11.2	7.9	70.0	3.4	30.0
광주	4.6	3.3	71.7	1.3	28.3	1.3	5.9	3.3	56.1	2.6	43.9
대전	6.6	4.1	61.7	2.5	38.3	1.1	7.7	4.1	52.7	3.7	47.3
울산	2.3	1.6	70.5	0.7	29.5	1.9	4.2	1.6	38.0	2.6	62.0
세종	0.4	0.3	67.5	0.1	32.5	0.6	1.0	0.3	26.3	0.7	73.7
경기	43.6	27.7	63.6	15.9	36.4	4.5	48.1	27.7	57.6	20.4	42.4
강원	11.0	5.7	52.3	5.2	47.7	1.3	12.3	5.7	46.7	6.5	53.3
충북	10.2	5.3	51.6	5.0	48.4	1.7	12.0	5.3	44.1	6.7	55.9
충남	9.0	5.0	55.5	4.0	44.5	3.3	12.3	5.0	40.8	7.3	59.2
전북	11.0	7.7	70.2	3.3	29.8	3.0	14.0	7.7	55.1	6.3	44.9
전남	16.1	11.3	69.9	4.9	30.1	3.3	19.4	11.3	58.1	8.1	41.9
경북	12.1	9.3	76.7	2.8	23.3	4.4	16.6	9.3	56.1	7.3	43.9
경남	13.9	9.4	67.2	4.6	32.8	0.9	14.8	9.4	63.2	5.5	36.8
제주	3.7	2.1	57.1	1.6	42.9	1.7	5.4	2.1	39.0	3.3	61.0

자료: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중앙부처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60.

중양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시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시책은 크게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아동·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양육·보육·돌봄 지원사업으로 구분

Ⅰ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시책 Ⅰ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보건 복지부	임신 출산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의료비(행복출산패키지) · 안전한 분만환경조성 ·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건강관리) · 임신·출산 사회적 배려 강화 · 여성건강증진 강화(자궁경부암 등) 	노후 소득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국민연금 확립 (두루누리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 기초연금 내실화 ·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재정지원 시장형 일자리)
	아동 가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분유 지원 · 입양아동 양육지원 확대(수당지원) ·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친화도시인증, 영양플러스지원, 드림스타트) ·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건강 의료 안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 고령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 · 노인 의료비 부담경감(인공관절)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 치매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 노인 학대 예방 · 노인안심생활지원(독거노인돌봄서비스) ·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양육 보육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여가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경로당, 노인복지관 자원봉사클럽) ·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육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 초·중·고등학교 운영 · 교육·고용체계 개편(자유학기제 확산 등) · 다자녀(셋째)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평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국토교통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확대 	고령자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공실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 ·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 · 남성육아참여 활성화(육아휴직급여) 	연금	· 퇴직·개인연금 확산 정착
	청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창업일자리 센터 등) 	취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 중고령자 창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가족부	청소년 일가정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내실화,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	-

자료: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63~64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자체사업예산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자체의 경우 사회이동이 비교적 적은 고령자보다는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급, 임신부 건강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미혼남녀 결혼지원 등 출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박진경·김상민, 2017)
 -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정책보다 출산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인구 증대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

② 국가균형발전정책

⑧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제정, 2018년 2월 28일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계정의 명칭도 변경됨
 - 생활기반계정이 지역자율계정으로, 경제발전계정이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원래 명칭 유지
 - 지역발전 대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예산 편성절차에서 균형위(지역 위)의 역할이 더 커짐
- 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되며 지역자율계정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37개)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6개)으로 구분되며 지역지원계정 사업은 각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함
 - 균특회계 내에서 재정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하며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함

Ⅰ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회계명칭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목적	·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효율적 추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정구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용어변경	·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 지역생활권 / 경제협력권 · 지역발전계획·시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 기초생활권 / 광역협력권 · 국가균형발전계획·시책

자료: 기획재정부(2018.4),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재구성.

- 우리나라 시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면 총 229개 시군구로 구성되는데 이를 지역 특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및 지역행복생활권지역으로 구분
 - 229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함
 -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5개 도서가 해당되는데 강원도에는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총 7개 시군이 포함됨
 - 특수상황지역은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6개 도서이며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로 총 6개 지역이 해당됨
 - 일반농산어촌은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지역으로 총 123개 시군이 해당되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총 9개 시군이 해당됨
 - 도시활력증진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지역,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 해당되며 강원도에서는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가 이에 해당됨

Ⅰ 강원도 시군구 생활권 구분 Ⅰ

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주관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총시군수	70개 시·군 및 185개 도서	15개 시·군 및 186개 도서	123개 시·군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자료: 기획재정부(2018.4),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재구성.

- 성장촉진지역개발의 국고보조율은 100%이며 지역개발 및 도서개발지원으로 구분되고 특수상황지역은 국고보조율이 80%이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Ⅰ 4개 지역유형별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 보조율 및 내역사업명 Ⅰ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1. 지역개발지원 2. 도서개발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2. 근린재생형(일반형) 3.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80%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경관개선 3. 지역소득증대 4. 지역역량강화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70%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5. 신활력플러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1.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2.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3. 연계협력사업

자료: 기획재정부(2018.4),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재구성.

⑧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임
 - 목표를 위해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를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복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p>비전</p>	<p>지역이 강한나라 대한민국</p>
<p>목표</p>	<p>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p>
<p>3대전략 · 9대 핵심과제</p>	<p>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hr/> <p>2.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2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hr/> <p>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도시 시즌2 2 지역산업 3대 혁신 3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p>실행력 제고 방안</p>	<p>[법령]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조직]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예산] 1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2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3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p>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8. 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3대 전략 중에서 인구정책 전략은 '공간전략'으로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조성과 관련됨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불편 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스마트 솔루션 접목), 공공상생상가 지원,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법·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 균형발전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벨트' 지정,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역량강화 및 활력 촉진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법·제도 개선
 -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에 지자체별 인구감소 대책 포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 검토
 - 인구 추이구조, 소득, 재정 지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마련
 -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재정비, 사업 다각화 등 지원 실효성 제고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
 - 인구 급감 지자체에 생활 인프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18년 10개, '19년 10개 등 '22년까지 총 50개 지원)
 - ※ 지자체·주민 주도의 사업 기획 →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 행·재정적 지원
 - 전국 어디서든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정 시설 배치·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 확대
 - 스마트 타운, 생애주기별 특화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 조성 지원,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확대

Ⅲ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추진현황

①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⑧ 추진배경

- 2017년 합계출산율 1.05, 출생아수 35만 8천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 기록,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
 - 출산율이 당초 최저 수준 전망(1.07)보다도 낮아짐에 따라 5년 이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 그간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지원 중심으로 전국적·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현장 접점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보다 근본적·종합적 접근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삶'에 중점을 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의 재구조화 필요
- 국가의 정책기조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정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⑧ 추진경과

-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 2016년부터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시책발굴, 특교세와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 저출산 극복의지가 강하고 기반이 우수한 선도모형을 선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재정지원

- 저출산 대응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에 전담부서(지역인구정책팀) 신설, 기준 인건비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지역분과' 신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지자체의 의견반영 통로 마련
-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합동평가의 '저출산 극복' 분야 지표 보강
 -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를 신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자원 지원

추진 방향

- 선도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도록 추진하며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민간참여 확대 추구
 -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사업,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 유형을 추가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하거나 사업수행 전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

관계부처 합동 공모사업 비교

구분	'17년 공모사업	'18년 공모사업
시책분	50억 원	35억 +15억(온종일 돌봄)
대 상	기초·광역지자체	기초·광역지자체
유 형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다함께 돌봄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지자체 간 협력사업, 온종일 돌봄

※ 온종일 돌봄사업 계획은 확정 시 별도 안내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p. 46.

📄 공모개요

-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사업을 포함하여 총 24개 사업에 재정지원
 - 2016년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원스톱 지역거점센터(성북구, 부여군, 완주군, 의성군)와 가족친화마을(밀양시) 등에 특교세 29억 원 지원
 - 2017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사상구 등 9개소),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과천시 등 10개소)에 특교세 40억 원 지원
- 2018년부터는 새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
 - 사업대상: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2018년 4월 25일 ~ 5월 30일)
 - 총사업비: 시책분 35억 원, 지방비 35억 원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 ※ 설계비, 건축공사비,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경비 지원(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규모: 7개 지자체 내외(광역·기초 포함), 각 5억 원 이내로 지원

📄 사업유형(선도모델 예시)

- 사업유형은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구축, 지자체 간 협력사업,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유형화
- 교육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선도사업”은 별도로 제주와 세종을 포함한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4.5억 원 내외를 지원함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등 사업을 신청(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필수)
 - 사업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등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지역 내 공공시설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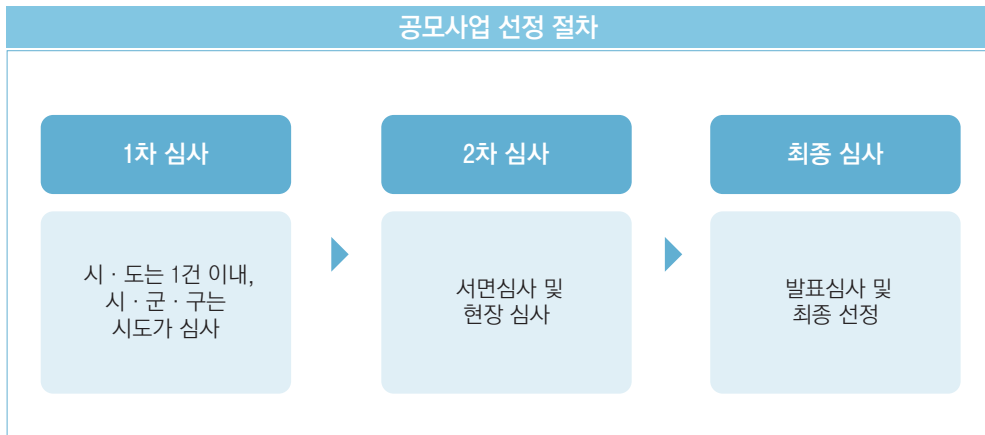
Ⅰ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유형(예시) Ⅰ

유형	내용	사업예시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구축	-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저출산 관련 민간위탁시설 연계)이 분산 제공하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 추진	- (세종시) 행복맘~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복지센터 3층을 맘스클리닉, 교육실, 임신부 운동교실, 쿠킹클래스, 행복맘&대디 커뮤니티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 31개 프로그램 운영 - (전북 순창군)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舊 보건 의료원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여성새일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포함, 산모쉼터, 키즈카페, 아이돌봄방, 청소년 직업체험관 등 설치
지자체 간 협력사업	- 생활권-행정구역(자치단체)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내 중심거점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 서비스 공급 효율화 - 지자체 간 협력 및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를 통한 저출산 대응 시설 조성 및 사업운영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	- (전북) 산모보건 취약지역 네트워크 구축(순창, 임실, 장수, 함양, 곡성): 안정적 수익구조가 유지되지 않아 민간 산부인과 설치 불가능한 지리산 인접 시군 내에 24시간 분만 의료센터 사업 운영, 남원·임실·순창 출산지원 담당, 산부인과의료인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행정협의회) 구성,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수립·추진
생애 주기별 지역 맞춤형 사업	- 생애주기별 특화사업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등) 또는 생애 주기를 연계·종합한 지역 맞춤형 사업	- (주거) 빈집 등을 신혼부부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 (결혼) 결혼 상담 및 지원, 작은 결혼식 플랫폼 구축 등 - (임신-출산-육아) 임신부 건강지원실, 영유아 보육지원실, 공공 어린이집 설치 등 - (육아) 산업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도서관 돌봄공간 설치
	- 민관협력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업	-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건립, 스마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근무 효율화 등 인식 개선
	-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사업	- (4차산업혁명) 미술치료 등 기법 활용, 안심보육 프로그램(app 등) 개발
SIB 활용사업 (가점부여)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민간 참여사업	- (서울시) 그룹홈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경계선지능 아동 100명의 자립지원을 위해 3년간 교육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예산집행 - (경기도) 「해봄」프로젝트: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의 수급자 대상으로 2년간 교육사업 추진 후 성과평가·예산 집행
기타 사업	- 그 외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적·효과적 사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공모절차

- 사업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위원회는 지방행정정책관 등 내부위원 2명, 저출산 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5명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
 - 1차 심사는 시·도 1건 이내, 시·군·구는 시·도가 심사하여 제출 건수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함
 - ※ 제출 건수는 기초자치단체수에 따라 제한되는데 기초자치단체수가 30개 이상은 3건, 16개 이상은 2건, 1개 이상은 1건으로 하며 제주와 세종은 각 1건 이내로 제출함
 - 2차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로 구성되며 서면심사는 시·도의 추천대상지 심사 후 2배수 이내 선정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 평가와 현장 의견 청취를 실시함
 - 최종심사는 지자체의 사업발표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7개 내외로 선정
 - ※ 2·3차 심사 결과(각 50%), 종합 및 광역·기초지자체,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p.49 재구성

사업평가체계

- 사업선정 기준은 운영계획(50점), 지원사업(50점) 및 가점(10점)으로 구성
 - 운영계획은 생애주기, 지역 특성 반영, 지자체 간 협력, 인식개선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조직구성,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등 추진 의지를 평가
 - 지원사업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를 평가하고 가점은 민간 참여를 유도한 경우에 주어짐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		내용	배점
사업 내용 (50점)	계획의 우수성	- 생애주기를 융합한 사업계획 제시 여부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제시 여부 - 지역 내 네트워크와 연계한 인식개선 사업계획 제시 여부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사업계획 제시 여부	30
	추진의지	- 인력 및 예산 지원 정도(매칭 비율) - 저출산 극복 총괄부서 운영 여부 - 지속가능성(향후 5년간 운영계획)	20
지원사업 (50점)	효용성	- 저출산 극복의 거점 활용 가능성 - 생애주기융합 실현 고려 여부 -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	10
	실현가능성	-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반영 여부 - 소요예산 확보 여부 또는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	10
	창의성	-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10
	확산성	-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10
	주민체감도	- 수혜자의 만족도 고려 여부	10
가점(10점)	민간참여 확대	- 계획·운영방식의 적절성·구체성·효과성 여부	10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p.53.

⑧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 사업발굴은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최대한 유도
 - 기존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
- 사업선정 후 사업집행 시 특별교부세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집행(민간보조 금지)하며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은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특별점검, 성과공유를 실시해야 함
 - 정기점검은 매월 관리카드 제출 등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함(점검단은 행안부, 시도,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 특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며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계획 변경 또는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함
 - 성과공유를 위해 2019년 6월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보고회 실시
- 컨설팅 실시
 - 선정된 선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한 총체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성공 모델로 육성
 -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외부전문기관 의뢰

⑧ 선정사업

-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사업을 포함하여 총 24개 사업에 재정지원
 - 2016년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원스톱 지역거점센터(성북구, 부여군, 완주군, 의성군)와 가족친화마을(밀양시) 등에 특교세 29억 원 지원
 - 2017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사상구 등 9개소),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과천시 등 10개소)에 특교세 40억 원 지원

I 관계부처 합동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 우수시책(2017년) I

지역	주요 내용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키우는 우리 경기”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 ·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시·도 중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설계, 인구정책 5개년계획 수립 (’18.2월 완료 예정)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흐름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유지를 목표로 일자리·저출산 SIB 사업모델 설계 · 전국 최초 저출산 인식개선 뮤지컬 제작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 임신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또는 복지플래너가 직접 가정방문, 산모와 신생아 건강 체크, 아이돌봄 방법 교육 등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 등 지원 · 선진 교육 프로그램(MECSH)*의 성공적 국내화,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현물 또는 현금 제공 위주의 사업 탈피 <p>* MECSH(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 엄마와 아동 중 건강발달 위험이 있는 가족을 위한 구조화된 지속방문 프로그램</p>
충북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 University(대학)-City(청주시)-Company(기업)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성원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역할 분담, 연계 · 출산 후 재취업제도 마련 등 기업참여 적극 유도, 실무자 워크숍, 소식지 발행 등 저출산 문제인식 공유·공론화 및 가족친화 제도 발굴 확대 · ’17.12월 현재 8개 대학, 27개 기업, 5개 단체 등 참여
서울 강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기업(단체)WIN-WIN프로젝트추진 · 다자녀가정과 기업체(단체) 간 결연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관심 증진,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업·단체 모집,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결연방식 채택
전북 남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 · 남원·임실·순창 출산지원 담당자, 산부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구성, MOU 체결 · 지리산권 산모보건 의료센터 구축 및 산부인과 전문의 보강으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 산후조리 지원 · 57개소 어린이집에 172명 노인을 파견하여 아이돌봄 지원(아이보듬이 사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Ⅰ 관계부처 합동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 우수시책(2016년) Ⅰ

지역	주요 내용
서울 성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행(童幸)” 프로젝트 · 임신·출산·육아·교육·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포털을 하나로 통합하는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18.5월 개통 예정) · 지역 내 아동과 관련된 기존 보건(아동전용보건소), 교육문화(아동청소년센터)시설과 신규 보육시설(베이비&맘스카페)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 원스톱 통합센터 구축
경남 밀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 ·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도서관, 노인정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공간 조성 * 100세대 이상 10개 아파트 대상 · 가족친화시설(마을사랑방, 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학습, 하교 길동행, 체험활동 품앗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 마을공동자치회, 밀양 아지매클럽(온라인) 등과 연계하여 주민의 자발적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마을 조성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1.7 희망플랜, 분만취약지 임신부 안전한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 강원도-시·군 보건소-대학병원-산부인과 간 협력을 통해 분만취약지(화천·양구 등 6개 시군) 출산지원 네트워크 구축 · 고위험 임신부를 사전 발굴·등록 후 맞춤형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자가관리 및 경보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병원 이송지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Ⅰ 행안부·복지부 공동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선정내역(2017년) Ⅰ

지역	시범사업명	사업 내용
울산 북구	「곰나무 그루터기」 사업	- (이용대상/운영시간) 초등학생 / 월~금 13~20시, 토 10~12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지역탐방 등 현장학습, 부모·자녀 프로그램 - (장소) 북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내 설치
경기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	- (이용대상/운영시간) 초등학생 / 월~금 13~19시, 방학 중 종일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생활지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안전 앱 서비스, 학원통원 지원, 간식제공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추진 - (장소) 공무원 관사, 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충북 청주시	「언제든 돌봄 나눔터」	- (이용대상/운영시간) 12세 이하 아동 / 월~금 9~22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 - (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커뮤니티 센터
충북 단양군	「아이키움 온(溫) 마을 사업」	- (이용대상/운영시간) 만 8세 이하 아동 / 화~토 오후~21시 - (서비스) 일시돌봄,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독서, 미술, 한자, 서예 등), 아동 15~20명당 온화원 지정하여 등하원 및 저녁도시락 지원, 장난감·책 대여 - (장소) 마을회관
충남 보령시	「틈새돌봄 놀이터」	- (이용대상/운영시간)초등학생 / 월~금 13~21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주중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용, 주말 현장학습, 간식제공 - (장소) 민간빌딩
충남 서천군	「송아리 돌봄센터」	- (이용대상/운영시간) 3~12세 아동 / 월~금 8~21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현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귀가지원 등 - (장소) 여성문화센터 내 1층
전북 익산시	「토요일 및 야간 일시·긴급 돌봄」 사업	- (이용대상/운영시간) 3~12세 아동 / 월~금 8~21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현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귀가지원 등 - (장소) 여성문화센터 내 1층
전남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	- (이용대상/운영시간) 3~12세 아동 / 월~금 13~21시, 토 9~13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퇴근시간, 방과 후), 등하원 지원, 숙제지도 및 놀이교실 운영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장소) 여성문화회관 별관 교육실
경남 창녕군	「또바기 돌봄」 사업	- (이용대상/운영시간) 초등학생 / 월~금 16~19시 - (서비스) 방과 후 일시돌봄, 이마용·간식지원, 귀가지원, 아동 심리지원, 치아관리 등(보건소 연계) - (장소)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경남 함양군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사업	- (이용대상/운영시간) 6~12세 아동 / 월~금 9~22시 - (서비스) 일시·긴급돌봄, 학습지원, 보건서비스 등 - (장소) 함양군 보건소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2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⑧ 추진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 유출,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의 ‘지역 엑소더스’ 등으로 읍면의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임
 - 1970년 읍면 인구비중은 57.4%에서 2040년 8%로 축소될 전망이다(UN, 2015)
-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의료·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생활안정성 저하 등을 초래,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심화
 - 또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생활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됨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⑧ 추진 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및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를 추구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요구사항 발굴
 - 행안부의 저출산 대응선도모델사업(자치행정과),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및 마을공방(지역공동체과) 및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생활공간정책과),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문화기반시설 확충, 농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업과 연계
 -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개되도록 집중 지원

-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컨설팅단 운영
 - 인구감소 정책 및 사회문제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서면·현장실사 등 평가를 담당하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자문 역할

공모개요

-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방식은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 총사업비와 지원규모
 - 총사업비는 특교세 9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의 총 150억 원을 투입(사업비 매칭비율은 특교세가 60%, 지방비가 40%)
 - 총 10개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당 약 15억 원의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

공모사업 지원 대상 지역

- 2000~2017년간 인구증감율이 -5%인 지역
- 2013~2017년 평균 노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 2013~2017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2013~2017년 평균 20~39세 여성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자료: 행안부 내부자료,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계획.

- 사업 지역은 인구유출 방지 가능성이 있는 다수 읍면동 생활 중심지 또는 다수 마을의 거점마을이며 지자체는 사업유형 중 핵심(전략)유형을 선정하여 사업 선정
 - 복수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유형의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음

⑧ 사업유형

- 지역활력 제고, 생활여건 개선,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의 총 5개의 사업유형이 있음

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유형 Ⅰ

사업유형	사업 내용	사업예시
지역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자원·특산물·전통산업을 활용하여 경제자립 기반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관협업에 의한 지역활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역사 등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창고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등 조성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마을 조성 중심지에 공공시설 기능 집중 배치 문화·복지 시설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ICT 기반 스마트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타운 서비스 발굴 및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주민센터 스마트시티 독거농민 u-Care 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지자체 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활용 계층 간 신속한 서비스 공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통합 생활시설 융합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청소년·여성·농어민·노인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문가·활동가·지역주민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 정보교류·쉼터 노인 공동 홈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등

자료: 행안부 내부자료,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계획.

공모절차

- 공모절차는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1차 서면심사→2차 현장 실사→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시도의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나 시군구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시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의견 제출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사업평가체계

- 사업선정은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효과성, 주체역량 등을 평가하여 결정함
 - 사업타당성은 인구감소문제 해결 적절한 사업인지, 실현가능성이 충분한지, 공간구성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며 추진체계의 적절성은 계획수립, 사업집행, 사후관리 방안을 평가
 - 사업효과성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 여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표 사업유형으로 정립 가능성, 확산가능성을 평가함
 - 주체역량은 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지방비 예산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 그 외에 다른 중앙부처나 민간기업과의 협업사례가 있거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한 경우 가점을 부과함

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Ⅰ

선정기준		내용	배점
사업타당성 (30점)	사업 타당성	-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10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가	10
	독창성	- 거점공간으로서 공간구성의 독창성, 시설활용의 창의성이 있는가	10
추진체계의 적절성 (30점)	계획수립	-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방안이 적정한가	10
	사업집행	- 사업집행 시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가	10
	사후관리	- 시설 등의 사후 관리방안이 적정한가	10
사업효과성 (30점)	효과성	-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0
	대표성	- 인구감소문제 해결의 대표적 사업유형으로 정립 가능한가	10
	확산 가능성	- 모범사례로서 타 지자체에 확산이 가능한가	10
주체역량 (10점)	자치단체 추진의지	-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있는가 - 지방비 예산확보 여부 및 예산규모가 적정한가	10
가점(10점)		-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사례 - 민간기업(LH, KT, 지역기업 등) 및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협업사례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10

자료: 행안부 내부자료,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계획.

8 선정사업

- 2018년에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개 시군 및 경남 1개 군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음
 - 2017년에는 전북과 경남 2개 시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음
- 2018년의 경우 대다수 사업이 2개 유형 이상을 통합하여 추진
 - 지역활력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여건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3개 선정됨

Ⅰ 2018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내역 Ⅰ

지역	공모사업명	사업유형
강원 화천군	화천행!!! 일자리 & 돌봄 클러스터 구축	공동체 활성화
강원 인제군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충남 보령시	약관에서 불혹까지 '곰내 줌마아재 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충남 서천군	다시 하나 된 마을 철길 건너 희망으로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전북 김제시	활력 충전!! 사람 살기 좋은 성산별곡	지역활력제고
전북 임실군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전남 곡성군	청년들과 여행자의 든든한 '비밀 언덕 곡성'	지역활력제고+ICT 기반 스마트타운조성+생활여건 개선
전남 보성군	귀농·귀촌인 마중물 사업 '소멸위기 문덕면 살리기 프로젝트'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경북 문경시	聞慶에서 청년의 행복을 캐내다, - 청춘뎀발 in 山陽	지역활력제고+생활여건개선
경북 봉화군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경남 함양군	함양 산양삼 Welcome 농장 조성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자료: 행안부,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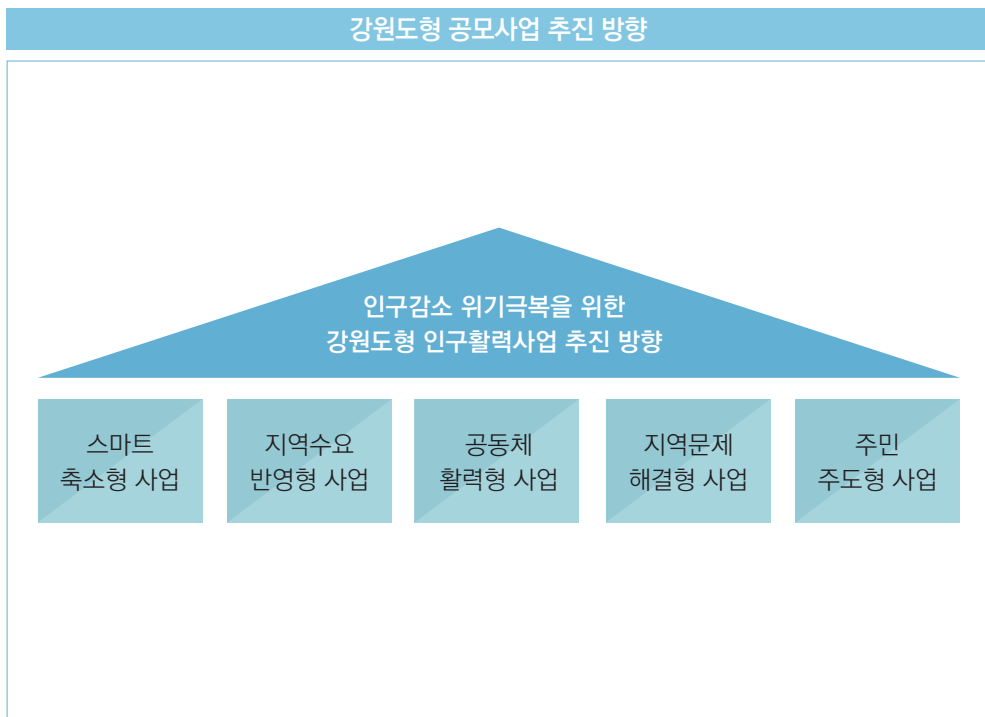
Ⅰ 2017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내역 Ⅰ

지역	공모사업명	사업 내용
강원 평창군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 지역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관광 활성화 -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축
충북 음성군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 교육, 상담, 복지, 봉사사업
충남 예산군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 노인어르신 문화복지 충족 -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
전북 정읍시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시 조성	- 동네 레지던시 조성 등 지역활력 제고 - 공동체활성화(노인공동식사, 청년유입 등)
전북 고창군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	-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생태마을) 조성 - 일자리, 창업 등 지역활력제고
전남 강진군	농촌을 두드림! 아이의 울음! 희망이 열림!	- 지역활력 커뮤니티센터(민관기관) 설립 -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인 소득증대 - 노인공동주거시설 및 아동 돌봄센터 건립
경북 영양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 인구지킴이 민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 육아돌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경남 하동군	유엔유 (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조성	- 실버귀촌적응센터 복합운영 프로그램 운영 -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등
경남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 폐교를 활용한 참살이 팜빌리지 조성 - 참살이 교육문화센터 조성, 여가창작소 조성

자료: 행안부,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IV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1 스마트 축소형 사업 추진

-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생산은 동시에 위축되는 반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증가하여 경제가 침체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진입(이희연, 2017; 박진경·김상민, 2017)
 - '97년, '08년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서성장 기조로 진입했으며, 뉴노멀(new normal)이 상시화된 시대 돌입

- 획기적인 추세 변화(shock)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뉴노멀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변화를 수용하면서,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를 지역 재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소규모 거점 소프트 지역 개발, 의료·복지·교육 등 행정서비스 효율화·집약화, 의료 및 교통 등 사각 지역의 전달 서비스 강화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2 지역수요 반영형 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하에서 결혼·출산·양육·보육 등 사회복지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책과 동일하게 추진될 필요는 없음
-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역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강원도에서 새롭게 야기되는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인구감소의 원인과 현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출산·양육·보육 위주의 사업구조가 아니라 일자리나 주거 등 지역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공동체 활력형 사업 추진

-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 속에서도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사업 추진
 - 메가트렌드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키는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더라도 아동, 청년(소)년, 고령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이 모두 원하는 체감형, 활력형 사업 추진

4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

- 지역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모두가 살맛나는 지역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지역 공동체가 함께 육아문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5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 지역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보육환경 증대 등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사업선정 시 현장실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발굴설정
-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감소 위기극복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지원시책이나 프로그램 발굴
 -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복합형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사업명 : 인구감소 위기극복 “강원도형 인구활력사업”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총사업기간: '19년~'21년(3개년)
- 총사업비: 100억 원+(도비 50억 원 + 시군비 50억 원 + 민간)
- 주민 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조합, 법인, 활동가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주민조직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3년 동안 총 10개 지역 선정

사업유형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인적, 물리적,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의 사업 추진
 - ① 돌봄·교육 기반형 인구활력사업, ② 청년회귀형 인구활력사업 ③ 마을소득 창출형 인구활력사업, ④ 마을 재구축형 인구활력사업 ⑤ 연계협력형 인구활력사업
- 단순한 시설확충사업은 지양하고,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휴먼웨어 종합 지원
-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인구활력사업 영역 중 에서,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지원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진단,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자원 진단, 지역수요분석 선행

Ⅰ 강원도형 인구활력사업 유형 Ⅰ

사업유형	지역문제 진단	주요 내용
돌봄·교육 기반형 인구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여건 악화 등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형 - 교육입지나 여건에 따른 인구유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영역의 돌봄·교육 서비스형 지원사업 - 육아나눔터 및 육아 공동체 육성 등
청년회귀형 인구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부족,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심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등 젊은 군인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형 지원사업 - 강원대, 강릉대 등 지역대학 청년 졸업생들의 회귀지원사업 등 ※ 강원 지역부흥협력대 육성사업 연계
마을소득 창출형 인구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및 소득기반 약화, 경제적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및 소득증대사업 - 문화·관광 활성화형 소득증대사업 등
마을 재구축형 인구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붕괴, 구도심 쇠퇴, 빈집증가, 주택 노후 등 기반시설 노후 및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귀어 장려, 다문화 지원, 마을 활력 공동체 육성 등 - 공간 리모델링, 커뮤니티 조성 등을 활용한 정주 여건 증대, 빈집, 유휴공간 활용 등
연계협력형 인구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연계, 지자체 간 연계 등 유휴시설 정비 및 정책 방향 유도를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활용 - 기관연계·시설연계 공동운영 등

3 추진방식

시범사업 공모방법

-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내 시군에서, 지역 내 인구활력 시범사업의 희망지역을 선별하여 시군당 1개소 이내 신청
 -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은 일정 양식의 시범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역선정

- 강원도형 인구활력 공모사업 신청지역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거나 사회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공모 제외지역

- 자연적 인구증가, 사회적 인구로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형 1에 속해 있는 지역 (원주시, 춘천시)

- 강원도형 인구활력 선정지역은 특히, 청년층 인구유출,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소득 기반 약화, 주택 노후, 빈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활력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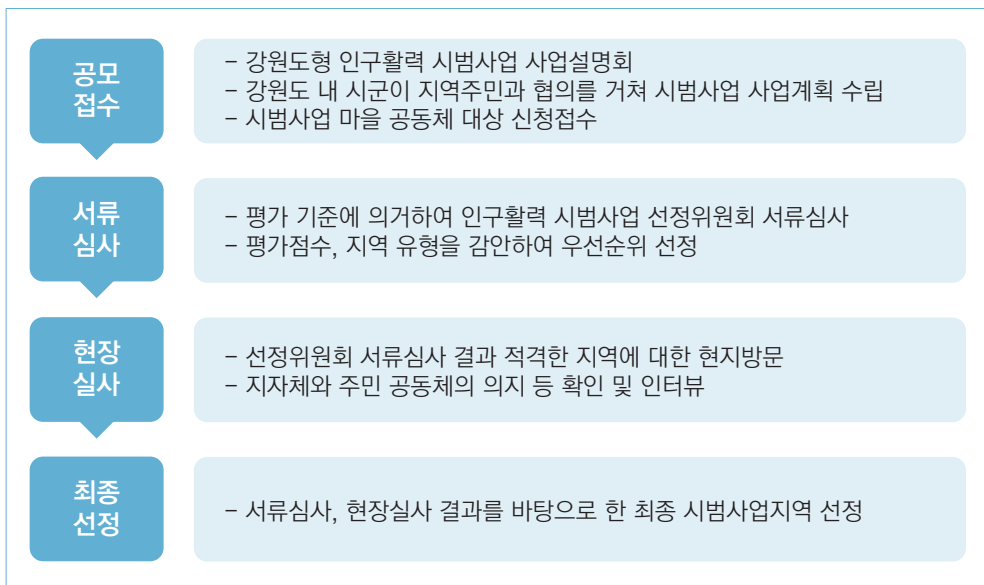
선정기준

- 주민, 조합, 법인, 마을기업 등 마을 공동체의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
-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역
-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방이 가능한 지역
- 사업 시행 후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

평가방법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는 추진체계 구축 등 요건 적합성 여부를 심화하고, 현장실사는 지역의 인구 감소 정도 및 추진 의지, 수행능력 여부 등 심사
-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는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2명, 외부 5명 총 7명으로 구성
 - 내부위원 2명(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외부위원 5명(학계, 연구원 등)
- 평가비율: 서류심사 30%, 현장 실사 70%, 가점(총점의 10% 이내)
- 평가방법
 -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 신청지역을 평가하여 시범사업 3배수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 절차



8 평가기준(안)

-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추진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운영관리의 지속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
 - 인구활력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합의와 방향 설정, 명확한 추진 주체 설정,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
 -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보다는 작지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이를 평가함
- 평가 기준별 배점은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설연계, 기관연계, 또는 시군 간 연계 협력하는 경우 가점 10점 부여

Ⅰ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 선정 평가기준(안) Ⅰ

선정기준		내용	배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 각 시군이 스스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인구감소 원인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 미래 인구전망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30점
	인구정책 방향의 적절성	- 주민합의에 의한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인구증대 vs 현상 유지, 사회증가 vs 자연증가 등)	
	사업목표의 부합성	- 사업의 목표와 핵심가치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 주체의 명확성	- 마을공동체, 조직 등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역량이 있는가?	20점
	지자체의 추진 의지	- 시군 지자체의 추진 의지 또는 지원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 지방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주민참여	-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는가?	
운영관리의 지속성	사후 운영관리	- 시범사업 종료 후 시설운영 등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운영 주체가 명확한가? - 운영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30점
	민관협력체계	- 지역주민,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컨설팅을 통한 발전지속성이 있는가?	
사업의 효과성	효과성	-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점
	지속가능성	-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마중물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 모범사례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확산 가능한가?	
가점		- 민간참여 확대(기관연계, 협업) - 지자체 간 연계협력, 도농상생	10점

4 추진전략

1 시군별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관리

- 강원도는 광역차원에서 인구감소방지 및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변화 추세, 인구감소 진단, 인구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총괄하는 인구감소방지 및 인구활력계획 수립
 - ※ 일본은 도도부현 별로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지방창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인구추계, 인구감소 요인 파악, 인구감소방지 시책 등을 포함
-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과대 추정된 계획인구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반영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공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하에서 사업추진
 - 제반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후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정량적, 정성적 원인을 진단한 다음 인구감소 방지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모든 지역이 인구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활력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2 강원 인구취약지역 지정 및 우선 지원

- 강원도는 다행히 2000년 이후 원주시와 춘천시는 인구가 자연적,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귀농·귀촌 증가 및 젊은 군인인구 증가로 횡성군, 화천군과 양구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들 지역도 연차별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 “인구소멸 우려 지역”(가칭)을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지역의 선정을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인구감소 요인 등의 지표를 적용 하되, 인구의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모두를 고려하는 방안을 적용
- 특히, 강원도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의 인구증가지역이라고 할 지라도 20대 청년층 인구는 유출되고 있는 경향

- 유형Ⅳ와 유형Ⅴ의 경우 20대 인구유출 경향은 인구증가지역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전략 필요

Ⅰ 강원 인구소멸 우려 지역 예시(2000~2016)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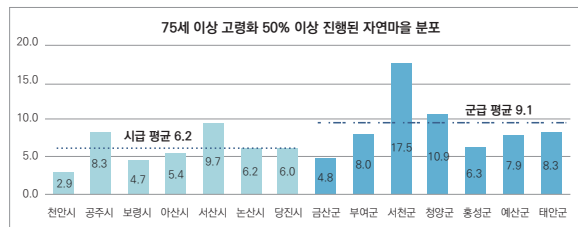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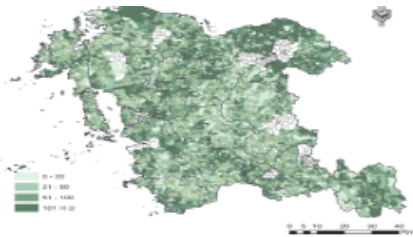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시	군
총인구 감소 지역	+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철원군, 인제군
	-	+	-	-
	-	-	삼척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주: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은 2017년 사망자수 통계의 부재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함(주민등록인구 기준).
출처: 박진경·김상민(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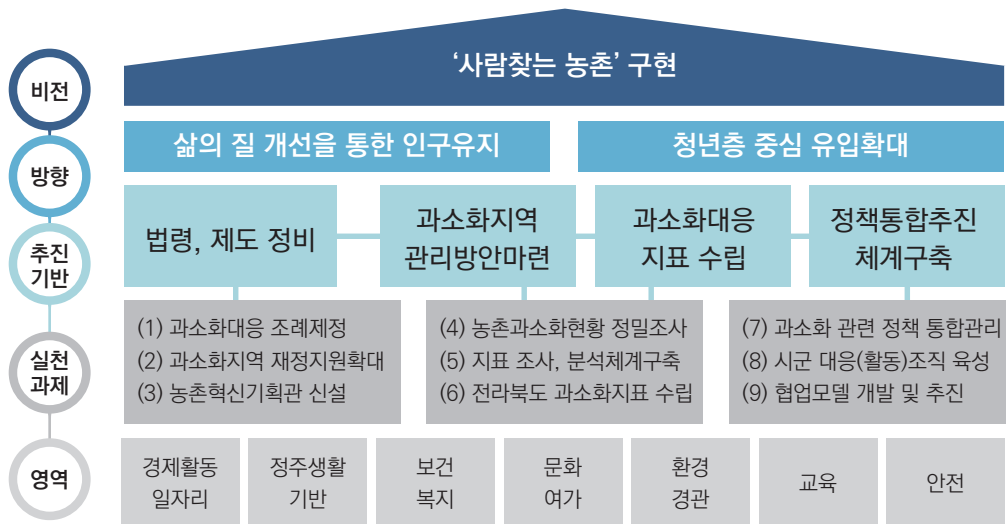
- 강원도 내 자연증감, 사회증감을 모두 고려한 인구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

충남과 전북의 GIS를 활용한 '과소화마을' 분석

- 충남과 전북은 인구감소시대, GIS를 활용하여 과소화마을(20호 미만의 마을)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농촌지역 행정리 4,242개소, 자연마을 10,860개소, 소지역 11,217개를 조사, GIS를 활용 데이터로 구축, 각종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전북의 경우 사람 찾는 농촌 구현을 위해서 2016년부터 전라북도 농촌지역 과소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소화 대응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과소화 대응 조례 제정, 농촌혁신기획관 설치, 전라북도 과소화대응 지표를 활용한 통합관리



3 강원 지역부흥협력대 육성사업 연계추진

-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인구활력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경우 강원 지역부흥협력대 육성사업을 연계 추진
 - 강원도 농어촌지역에 정착할 전문 현장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들의 정착을 건인하기 위해서 청년 위주로 선정해서 파견하여 시범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부흥협력대의 선발, 구성, 지원 등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Ⅰ 강원 지역부흥협력대 구성, 운영(안) Ⅰ

구분		내용	비고
선정 및 구성	선정 주체	- 강원도가 지역부흥협력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발	기획실 주관
	선정 기준	- 연령(청년), 의지, 창의성, 인구감소 지역 정착 의향 등	
	선정 절차	- 공고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 심사 등	
	선정 인원	- 인구 비례에 의해 초기 50명 정도, 후기 100여 명	
운영 및 지원	대상 지역	-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청이 심의	
	활동 기간	- 1~3년이며 3년 후 필요 시 심사 후 재선정 가능	종료 시 심사
	지원 내역	-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개인당 연 3,000만 원 정도 지원	분기별 심사
	정착 유도	- 해당 지역에서 거주 및 정착을 유도	정착 지원 별도

자료: 김현호·박진경(2017), 「충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역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재구성.
출처: 일본 총무성

4 전문 컨설팅단 운영

-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함

- 강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컨설팅단(pool)을 구성하고,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 강원도형 인구활력 시범사업의 컨설팅은 사업의 주요 추진단계별로 시행하거나 세부사업과 연계해서 시행
- 컨설팅단(pool)은 정기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자문을 시행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여 수시적으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

5 강원도 인구활력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면밀한 분석 결과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2015년에 접경지역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균특회계 지역 구분상 특수상황 지역인 접경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현재 강원도 인구소멸 우려 지역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성장촉진지역은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에 해당
 - 그러나 자연감소, 사회감소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인 유형Ⅳ에는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이 포함
- 도 차원에서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 특별회계를 마련, 편성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 필요